

‘한반도의 봄’ 당긴 文정부, 무게중심 다시 일자리에

5월 청년실업률 10.5% ‘역대최고’
청와대 “안정적 일자리는 늘어”
김동연 “맞춤지원방안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등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봄’을 성큼 앞당기고 있는 청와대의 업무 무게중심이 일자리, 소득 등 경제 문제로 옮겨가 하반기엔 ‘혜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쇼크’와 소득 및 투자 정체,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들의 경영난 가중 등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경제 문제가 자칫 외교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청와대, 정부 부처, 연구원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5월 청년(15~29세) 실업률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10만명대이던 취업자 증가폭 5월 7만명대까지 추락’ 등 암울한 내용이 담긴 ‘5월 고용동향’을 지난 15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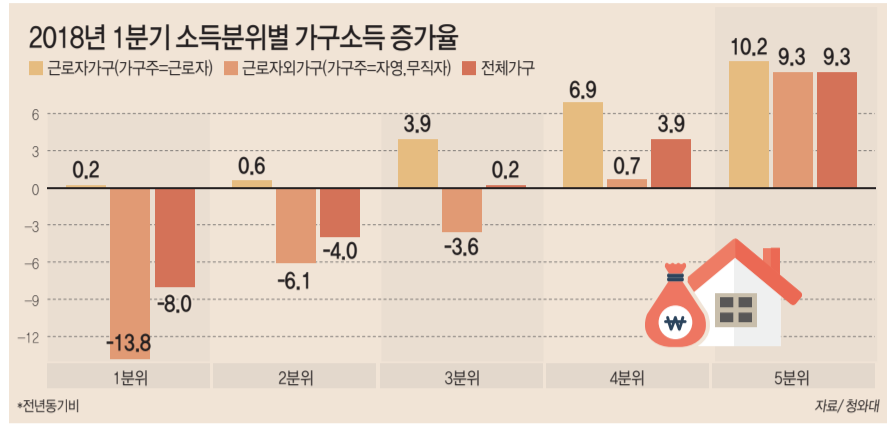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 취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으려 할 때만 되면 일자

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던 날 청와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자리정책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감소했지만 고용의 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3년째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 고용 효과 높은 자동차 업황 부진, 더딘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음식·숙박업 등의 부진이 취업자 증가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2700만 명 정도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이 1300만~1400만 명, 임시일용직이 600만명 정도이고, 상용직은 5월에 32만명 늘었다. 반면 일용



직은 11만~12만명 줄어드는 등 안정된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달 고용통계가 15일이 속한 일주일 기준을 잡는데 5월의 경우 13~19일 사이 나흘 정도 내린 비가 고용에 악영향을 줬는데 6~7월로 가면 반전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6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 지방직 공무원에 응시한 15만명 가량을 통계상 시험 보기 전엔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시켜 실업자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원서를 내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실업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5월 청년실업률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5월 고용동향이 “충격적이고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김 부총리는 “업종별, 계층별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고용 분야에 이같은 ‘비보’가 들려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 등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사의 표명 내용이 주말 사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장하성 실장은 관련 보도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근거 없는 오보”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없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

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분배 등 불균형 문제도 일자리 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560만명 가량인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과밀 수준이 타 지역보다 심각한 서울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가운데 소상공인의 68%는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뼈든한 실정이다. 서울에서도 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72% 역시 근로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좀처럼 고용시장이 확대되지 못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고, 대안을 찾아 자영업에 뛰어들어 사람들과 월급쟁이들보다 수입이 적다보니 먹고살 걱정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일자리 창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하청업체는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싼 임금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다보니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나마 고용에 적극적이었던 기업들조차도 투자 부진과 시장 한계로 성장에 위협을 받으며 인력 추가 채용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感的 정치’ 그만... 빅데이터 정치로 국민과 소통해야

작년 ‘文 1번가’ 정책 소핑몰 폭주
‘소통 데이터’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선거 결과를 빅데이터 중심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국민정책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구축을 준비하듯, 정당 역시 대세나 감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정책 소핑몰 ‘문재인 1번가’를 내놔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소핑하면, 당선 뒤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1번가 누리집은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같은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광화문 1번가’가 운영됐다. 광화문 1번가는 약 50일 동안 방문자 100만여명, 정책제안 18만여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다시 조성했다. 국민과의 정책 토론이 이어지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다음달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광화문 1번가가 기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가 ▲국민의 생각을 듣고 제안을 접수하는 정책 소통의 시작(2017년 1단계)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홈페이지 캡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 소통의 심화·확산(2018년 2단계) ▲적극적인 정책 소통이 제도화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3단계)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제제기와 답변 수준에 머물렀다면, 광화문 1번가는 소통으로 쌓인 데이터가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일부 여당 후보는 공약 대신 문 대통령의 친분 과시에 집중해 유권자에게 외면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훈풍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라는 ‘대세’와 감에 의존한 선거가 여전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논란, 전통적 야당 표밭에 대한 안일한 자세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에서마저 참패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강장욱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7일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적극 나서는 반면, 정치는 달라진 점이 없다”며 “각 정당과 청와대가 기존처럼 코드에 맞는 전문가나 NGO(비정부기구) 의견만 들을 경우, 실제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입법부에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왔을 때, 청와대 게시판의 동영상 답변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혁신에 대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정책 발굴과 법안 발의에 나서는 틀을 빨리 개발해 놓아야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역명을 요구한 정보기술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특정 SNS 선호도 등 세 대별로 만드는 데이터가 다르므로, 표본 선정과 분석 등 방법론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범종 기자 jker@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격 중단 방위비분담 협상에 어떤 영향?

美的 증액요구 명분 약해질 것
소요기준·협상 기간 바꿀수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4차 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 같은 방향으로 차기 회의 개최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측에선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맞선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락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북미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에서 한반도로의 전락자산 전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북) 협상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워 게임(War game-한미연합군사훈련)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방위비 협상단 역시 2019년 이후분 방위비 협상에서 전락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며 우리 측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향후 미 전락자산 투입에 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반을 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미국 측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열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락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천명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락자산 전개비용 청구는 그 근거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총액 얼마’ 식이 아닌 ‘소요 기준’으로 바꾸거나, 기간도 5년 단위가 아닌 매년 협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북대화 진전 시 주한미군 규모가 감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